‘민간공원 특혜 의혹’ 고위간부 구속

광주지법 “범죄혐의 소명 · 증거인멸 우려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전 유출 혐의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2단계 사업 진행과정에서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 고위간부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평가표를 광주시의원 등에게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경실련으로부터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내용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와 평가결과 보고서 유출, 우선협상대상 선정 과정의 이의제기 수용 의혹, 특정감사 실시 배경 이유, 광주도시공사 중앙1공원 사업자 반납 등이다.

검찰은 광주시청 두 차례, 광주도시공사를 한 차례 압수수색한데 이어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은 시 감사위가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특정감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 정보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도 자진 반납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정 부시장을 전날까지 4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도 6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월미도에 설치된 대형 사이다병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월미도선착장에 대형 사이다 조형물이 전시돼 있다. 이 조형물은 월미바다열차 승객에게 인천이 사이다 최초 생산지로서 명성을 날렸던 점을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다.

올해 수능도 감독교사는 서서 근무

교육부, 의자 배치 불가

올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 감독관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교사는 하루종일 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 단체가 요구해온 ‘수능 감독관용 의자 배치’를 교육부가 거부했다.

3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교사 단체가 요구해온 ‘수능 감독관 의자 배치’에 대해 “국민 정서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보낸 답변서에서 “(수능 감독관 키높이 의자 배치는) 학생, 학부모들을 포함한 국민적 정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올해 수능시험에 즉시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교 내신시험에서나 각종 국가 주관 시험에서는 감독관용 의자를 배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의자 배치에 따라 시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민원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감독관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감독관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을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슈 판결

회식자리 자발적 음주 뒤 무단횡단 사망 경찰…法 “순직 인정 할 수 없어”

팀원들과 술을 마신 뒤 무단횡단을 하다가 숨진 경찰관에 대해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사망한 경찰공무원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교통조사계 팀원들과 2차에 걸쳐 회식을 했다. 2차 회식장소에서 먼저 나온 A씨는 본인의 차량을 세워둔 1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면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했고 과속하던 차에 치여 숨졌다.

A씨 아내는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했다”며 유족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공무상 회식이 아닌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으로 보이고, 음주 뒤 무단횡단으로 사망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A씨 아내는 행정소송을 냈다. 유족은 “이 사건 회식은 소속기관의 관리를 받는 공무상 회식에 해당한다”며 “회식 당일 약 12시간 일한 뒤 술을 마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무단횡단을 했고, 제한속도를 2배 이상 초과한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대로 공무상 회식에 해당한다고 해도, A씨에게 술을 강요한 사람은 없었고, 만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빠른 속도로 뛰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이번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사망한 당일 주간근무를 하면서 다소 과로했다고 해도, 회식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취하게 됐다”며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해 사고에 일어난 이상 공무와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학내 갈등’ 조선대 구성원들, 교육부에 탄원서 제출키로

대자협, 6일까지 탄원 · 서명운동…“대학 안정화” 호소

강동완 전 총장 해임 문제로 학내 갈등을 겪고 있는 조선대학교 학내 구성원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1일 조선대에 따르면 대학 최고 협의기구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는 전날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학내 구성원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은 6일까지 진행하고 탄원서 제출 장소는 교수평의회 사무실과 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총학생회 사무실 등으로 정했다.

탄원서 서명은 오는 13일 예정된 강 전 총장 2차 해임에 대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보류된 신임 총장 임명을 조속히 진행해 안정적인 발전을 바라는 구성원들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구성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각종 소송전과 여론전으로 대학을 혼란에 빠뜨린 이는 강동완 전 총장”이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총장 후보자의 취임을 하루빨리 시행해 대학이 안정을 찾고 다가오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지난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 탈락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11월 강 전 총장을 직위해제했다.

교육부가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에서 직위해제 ‘무효’ 처분을 내리자 법인 이사회는 이튿날 강 전 총장을 다시 직위해제하고 3월에는 해임 처분이라는 강수를 뒀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소청심사를 통해 직위해제는 ‘무효’, 해임은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 전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토대로 업무에 복귀하려고 했으나 법인이사회는 9월18일 또다시 해임하고 총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강 전 총장은 해임에 반발, 교육부에 다시 소청를 제기했고 법원에는 대학을 상대로 총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법원은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 사이 조선대는 새 총장 선출 절차를 거쳐 지난달 1일 투표를 통해 민영돈 의학과 교수를 제17대 총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2심인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지난달 23일 원심을 뒤집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9월 법인 이사회가 내린 강 전 총장에 대한 2차 해임과 관련한 교육부 소청이 진행 중인 만큼 소청심사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총장 임명을 중지하라고 주문했다.